

북한의 경제건설노선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

권영경

<차 례>

- | | |
|--------------------------|-----------------------------|
| I. 서론 | Ⅲ. 김정은시대 경제건설노선의 변화과정 분석 |
| Ⅱ.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의미 분석 | Ⅳ.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의 향후 전망 |
| | V. 결론 |

[국문요약]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제7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기존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의 전화를 선포했다. 이는 2016년 제7차 당대회때까지만 해도 병진노선이 영구적인 전략적 노선이라고 확정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은 3대 세습정권으로서 탈냉전시기 현실사회주의체제의 이행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표명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담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정일시대에 현실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단계 이후 김일성사회주의 체제를 세계화된 국제질서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소위 사회주의 재생·개건전략을 더욱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일이 이런 차원에서 개념화했던 선군경제건설의 특징적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전략적 지위에 올라서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기존의 군수산업 우선 자원재배분 정책을 수정해 김정일시대 말기부터 언급해왔던 ‘군수-민수전환 spin-off전략’을 새로이 개념화한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서 지식경제강국 건설에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김정일시대보다 확장된 개혁성과 개방성을 포괄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제개발구정책을 정책수단으로 세트화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기존의 지령성 계획을 포기하고 경제를 지도성 지표에 의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정책은 ‘80년대~’ 90년대 초반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를 상당부분 벤치마킹하고 있다. 따라서 선군경제건설노선→병진노선→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의 변화과정은 기존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축으로 자주와 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체제유지향적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김정은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진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노선은 향후 이를 담보하는 안보환경의 조성여부 및 시간표에 따른 상당한 변수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제어: 사회주의 경제강국, 선군경제건설 노선, 병진노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김정은식 개혁개방

I. 서론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설에서, 2017년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우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여 부강조국 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세워놓았다고 자평한 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정권의 브랜드와 같았던 병진노선을 폐기하였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 이라고 경제건설노선의 전환을 천명한 것이다. 이후 김정은은 3번의 남북 및 북중,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 자신들의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며 예년에 비해 경제현장 위주로 현지도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김정은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있다” 고 말하는가 하면, 5월 16일 북한의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시진핑과의 면담에서 “조선노동당이 경제발전에 우선 역량을 집중하는 새 전략노선을 관철시키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중국의 경제건설 및 개혁개방의 경험을 배우러 왔다”¹⁾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11.27~30일 간에는 리영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 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이러한 중국식 혹은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학습 의사 표명은 예전처럼 단지 레토릭은 아닌 것 같다. 김정은이 11월 16일 신의주개발계획을 지도하면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우선 중국과 개발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11월 25일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포럼에 대외경제성의 경제개발총국장이 처음 참가해 “북한의 22개 경제개발구·특구에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게 최우선 정책이라며 금융선진국을 본따 새 금융법규를 마련하고 특히 중국의 성공 경험을 모델로 삼고 싶다” 고 공식 천명하기도 했다.²⁾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중국의 당교에 입교해 중국 개혁개방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경제개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일명 조선개방감독국)도 개설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도 전해지고 있다.³⁾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핵보유를 국내법으로 영구히 하고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는 병진노선이 확고한 전략적 노선이라고까지 표명한 바 있는데, 북한은 과연 중국, 베트남처럼 획기적인 경제건설노선의 전환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1) 이희옥, “김정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경제발전 셈법은 달라”, 중앙일보, 2018년 11월 26일자.

2) 연합뉴스, 2018년 11월 27일자.

3) 연합뉴스, 2018년 11월 7일자.

방향성은 무엇일까?

김정은정권은 3대 세습정권으로서 김정일시대부터의 세계화 현상에 조용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정권의 경제건설노선 변화의 방향성은 1978년 중국과 달리 아마도 선대부터 강조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플랜의 한 일환으로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스스로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는 대외안보적 선포, 최첨단을 선호하는 3대지도자의 성향과 지식경제강국이라는 김정일시대와 차별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개념을 반영해,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은 체제유지지향적 측면을 유지하더라도 보다 진화된 내용성으로 계승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의 실행전략에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 및 대외개방 측면이 더욱 확장된 성격으로 포괄될 것으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김정은시대는 시장화 현상이 질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경제구조가 이중구조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의 변화과정과 그 내용, 전략들을 외부에서 과학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주요 문헌들, 특히 주로 『경제연구』 지를 통해 경제건설노선 변화과정을 내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유일체제로서 노선 변화과정에 대해 논쟁이 없을 것 같지만, 『경제연구』 지에서는 간혹 상호 대비되는 논지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들의 이른바 ‘말씀’ 소개에 의해 북한 지도층의 의도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문헌을 기초로 김정일정권의 선군경제건설의 목표와 전략을 분석한 다음, 이것이 김정은정권의 병진노선에 어떤 측면으로 계승되면서도 차이점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2018년 김정은정권이 제7기 당중앙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표명한 경제건설노선의 내용과 변화 방향성을 진단함으로써 ‘김정은식’ 개혁개방의 가능성 판단에 도움을 부여해 보고자 한다.

II.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의미 분석⁴⁾

북한은 ‘고난의 행군’ 당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김정일시대를 이른바 선군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공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선군경제발전노선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제시했었다. 김정일정권이 내세운 선군경제발전전략의 최종 성취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기까지 했다. 1990년대 모든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 및 개혁개방과정에 진입해가는 반면 북한은 오히려 탈냉전시대 이후 북한의 체제목표를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국가론(처음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었음)이라는 담론으로 대응한 것이며, 이 목표는 현재 김정은 3대세습정권에도 계승되고 있다.

처음 북한이 제기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대국) 개념은 그 언술만 보면 북한이 현

4) 권영경(2014) 일부 연구 참조.

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생존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문헌들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가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수준에 이른 사회주의” 5)로 규정하거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란 “정치사상력, 군사력, 경제력이 강한 나라로서의 강성대국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튼튼히 다져지고 전면적으로 발전되어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나라...사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주체조선, 김일성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는 나라” 6)라고 규정했었다. 북한의 이 주장들을 북한문헌을 통해 분석해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탈냉전 이후 일원화되어 있는 세계자본주의질서 및 세계화 질서에 편입해 체제의 연착륙을 강고히 구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도 이룩한 단계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북한은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이행의 길로 간 것은, 혁명의 주요 모순을 제국주의 세력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생산력에서 구하고 생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혁명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생산력 발전만을 우선시하는 수정주의를 채택하고, 당이 군대를 틀어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일이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사상이, 1990년에 붕괴한 「현실사회주의」 이후를 이어 받아 세계 사회주의역사 발전단계에 “새로운 사회주의발전 단계” 를7) 이룩하는 ‘건국강령’ 으로서 사회주의재생·재건전략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8)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은 과거 동서 냉전 진영질서와 같은 대외환경이 아닌, 초극화된 세계자본주의 질서속에서 체제를 방어하며 발전도 성취해야 하는 문제로 되어 있다. 즉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세력들과 대결하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문제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는 선군혁명노선을 김정일시대의 혁명노선으로 제기하였다.9) 북한이 주장하는

5) 노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1998년 8월 22일자.,

6)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2000), 평양, pp.6~7. 또한, 2009년 8월 말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리기성은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보통의 경제대국이 아니라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 이라고 언급했다. 리기성, “새로운 혁명적 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고 있는 조선경제”, 『2009년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자료집』, p.657.

7) 북한의 문헌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김일성 시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냉전시기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발전단계에서 북한 특유의 체제로 시조 체제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김정일 시대의 선군사회주의체제는 ‘현실사회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로서 사회주의 역사발전단계의 최종 단계로 규정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철학연구소(2000), 앞의 책, p.9, p.129.

8) 북한은 간부용 학습제강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요하게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라고도 언급하고 있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연착륙 뿐만 아니라 북한 주도로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상황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구체적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출판사 간부용 강습제강,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리마대진군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데 대하여』 (2000) 참조.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모든 정책을 항상 군사를 선차로 놓고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군사는 단순히 군대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방공업과 이와 연관된 모든 경제·사회분야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¹⁰⁾ 즉 군대 및 국방공업 유지·강화 문제를 다른 모든 문제보다 항상 우선시하고, 이에 기초해서 정치의 방향과 국가정책들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군사선행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경제건설노선은 위기에 처한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자원 배분 및 재원의 활용선택에 있어서, 국방공업의 유지·강화발전을 선차(priority)로 놓는 경제발전전략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북한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김정일시대의 경제발전전략으로 규정하면서 1990년대 초반 김일성시대에 시행했던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을 폐기하였다.¹¹⁾ ‘혁명적 경제전략’이란, 북한의 본질적 경제정책 기조인 자력갱생, 중화학공업 우선발전,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일부 수정, 무역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농업제일주의 등 이른바 ‘3대제일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권과의 접촉과 민생경제에 자원 우선 배분을 시도했던 경제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고백했듯이¹²⁾, 이 정책은 북한을 둘러싼 대외 국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고, ‘90년대 중반 경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기 이전의 대내경제 조건속에서 수립된 정책이었다. 김정일의 국가발전 플랜인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프레임을¹³⁾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체제방어상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경제적 대가없이 혹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유입할 수 있었던 외부 생산요소들의 조달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도 더 이

9)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자.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정치』(2006), 조선로동당출판사, p.97.

11) 이태섭교수에 따르면 ‘혁명적 경제전략’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비판이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 이전 이미 1995년 하반기부터 등장하고, 1997년 1월 신년 공동사설과 1월 24일 김정일이 전당 당일군회의에 보낸 서한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를 계기로 1998년 신년사설부터 ‘혁명적 경제전략’ 용어가 사라졌다고 한다. 실제로 이 서한을 보면 북한은 “군사를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2001), 『2001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제3권)』, 통일부, pp.253~257.

12) 북한은 1997년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면서 「김정일 플랜: 21세기를 이끄는 지도자의 전략」이라는 안을 세웠는데, 이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 이는 1998년 1월 「조선신보」를 통해 알려졌다.

13)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년~97년간을 유혼통치기간으로 삼는 동안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극복과 체제수호 그리고 김정일 시대의 미래 구상을 동시에 고민하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담론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북한체제의 미래 목표로 구축한다. 98년 9월 ‘김일성헌법’ 개정을 공표하기 직전 8월 22일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제시하고 그 상징적 징표로 98년 8월 31일 이른바 광명성 1호 미사일발사를 발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나중에 강성국가로 변화)으로의 출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상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를 창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의 작동이 마비되어 가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기존 북한의 중공업 우선 발전과정에서 경제적 잉여 조달 역할을 해주었던 경공업과 농업부문도 이제는 아예 생산력 파괴 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이 과거 자기완결적 논리의 자력갱생노선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대외경제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 개방전략과 결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과도 “전략적 부분 타협”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이 2000년 북중 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대외경제환경을 조성하고, 2002년도에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공식 선포하면서 동시에 4대 경제특구(나선·신의주·개성·금강산)정책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대내·외 경제적 제약조건을 반영한 행보였다. 선군경제건설노선은 한 마디로 제한적 대외개방과 시장기능을 부분 활용하는 실용적 경제정책과 쌍생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경제건설노선이었다.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담보해주는 물질적 토대 자체가 외부자본을 활용하는 대외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로 묶어둔 시장에서 조성된 부가가치의 이전을 통해 구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방공업 유지·강화에 필요한 재원들을 대외경제활동이나 특구를 통한 외부자본 유입으로 조달해야 했으며, 계획기능의 마비로 주민들의 민생경제 부문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심지어 나아가서 허용된 범위를 넘는 시장화 현상도 목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선군경제건설노선은 이미 정통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해가는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 유지전략 경제건설노선으로서, 당국이 의도하는 제한적 대외개방과 의도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 및 사후 이를 용인해 나가는 제한적 경제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미 90년대에 근본적 경제정책 전환을 시행한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노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군경제건설노선이 내포하고 있는 퇴행적 성격을 결코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군경제건설노선이 4대 특구정책 및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을 포섭했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할 당시 북한이 「과도적 사회주의단계론」까지 주장했었음을 볼 때,¹⁴⁾ 이 노선은 이후 김정은정권의 경제노선과 연계되어 나가는 포스트-사회주의체제(Post-socialist system) 이후의 특징을 첨부하고 있음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퇴행적 특징은 당연히 김정일시대에 북한경제가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경제가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경제화되어 나가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렇지만 김정일정권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발전론적 담론을 주장했었으며, 이 내용들은 현재 김

14) 이에 대해서는 권영경(2005),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동향에 대한 분석”, 『수은북한경제』 2005년 겨울호 및 권영경(2012),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북한경제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원, 2010년 3월호 참조.

정은정권의 경제건설노선에 상당 부분 계승되고 있고, 일부 현실적 측면에서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핵심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¹⁵⁾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흥미롭게도 ‘북한식’ 경제발전전략의 담론이 전개되어 있음을 고찰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군경제 즉 군수산업을 경제회복·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기존 북한의 자립적 경제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1980년대 경제수준을 뛰어넘는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¹⁶⁾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사용해 1980년대 후반경에 오면 군경제 부문의 비중이 국민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일부 전문가가 추산할 정도로 군산복합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소·공장에는 하나 이상의 군수관련 생산설비 및 공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었다.¹⁷⁾ 90년대 이후 심각하게 전개된 경제난으로 인해 인민경제 부문 → 당경제 부문의 순서로 축소재생산의 위기를 경험하고 이들 경제분야의 생산력 파괴 현상이 심각했었지만, 군경제 부문만은 경제난속에서도 생산의 순환적 과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¹⁸⁾. 또한 군경제 부문은 안정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무기수출 산업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을 수출재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가장 큰 외화가득 경제부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재건에 최우선 목적을 둔 김정일정권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경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재원을 북한경제 전체 생산력 복구의 원천으로 삼아 상시 동원체제로 전환하고, 군경제의 완전 정상화·성장을 원점으로 전 인민경제의 정상화·회복의 방향으로 동심원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경제회복전략 차원에서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채택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일반적·과학적 경제발전이론에 의거해 볼 때 북한의 이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김정일정권은 이를 ‘단번 도약’ 전략이라며 합리화시켰다.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구조가 국방공업과 민수생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국방

15)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2005년.

16) 앞의 논문에서 북한의 경제학자 리기성은 “고난의 행군을 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자립경제 강국으로 건설하려면 먼저 지난시기 자립적 경제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최고 생산 수준을 돌파하고 다음에 더 높은 고지점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언급했는데, 최고 생산 수준을 이룩하였던 시기란 다른 아닌 1980년대 중반경이라고 한다. 리기성, 앞의 논문, pp.658-659.

17) 임강택(2000),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통일연구원, p.69.

18) 성채기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군비증강과 관련된 당경제 및 군경제는 1989년 대비 1999년도에 약 7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민경제는 '89년대비 약 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성채기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2003), 한국국방연구원, p.29.

공업에 선차적 힘을 넣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했다. ① 김일성 시대인 1960년대부터 추진해 온 경제·국방의 병진건설 노선에 의해 국방공업·중공업이 산업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이른바 ‘북한식’ 산업구조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② 경제회복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토대들을 만들려고 낭비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토대들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③ 국방공업은 현대공업의 정수로서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이기에 이의 발전은 첨단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는 ‘군수-민수로의 전환’ 즉 ‘spin-off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국방공업 발전에 필요한 수많은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선차적으로 보장할 것을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부문에 요구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부문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그 발전을 추동한다. 뿐만 아니라 국방공업은 자기 부문의 최신 과학기술을 중공업부문에 보급함으로써 전반적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19)

자본요소 부존도가 낮은 저개발 경제에서 중공업(군수공업) 우선 발전전략은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민생부문의 저 발전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제한된 자원을 중공업(군수공업) 부문에 재배치·집중시키고 기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선진경제의 산업구조 수준에 단기간내 근접하려는 추격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²⁰⁾ 북한은 선진국가들이 국제경제질서 논리에 따라 후진국들에 권고하는 전통적인 ‘기러기 선단식’ 발전노선은 북한식 산업구조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스스로 주장하며 선군경제발전노선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이 산업연관관계의 단절과 원료, 자재, 에너지의 부족으로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생산을 중단·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과 집중의 자원재배분 정책이기도 했지만, “자주권을 튼튼히 수호하면서 인민생활문제도 동시에 풀어가며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일으켜 세우는” 합법칙적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²¹⁾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실행전략으로서 과학기술중시노선은 북한식 표현대로 중심 고리가 되는 정책이었다. 북한은 과학기술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있어서 사상, 총대와 더불어 3대 기둥이라고 까지 하며 국방공업 부문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에도 국가재원을 우선 집중 배분했다.²²⁾ 북한은 1998년부터 5차에 걸친 5개년 과학기술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해

19) 안명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력사적 위업실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20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년 제1호 루계 제154호, p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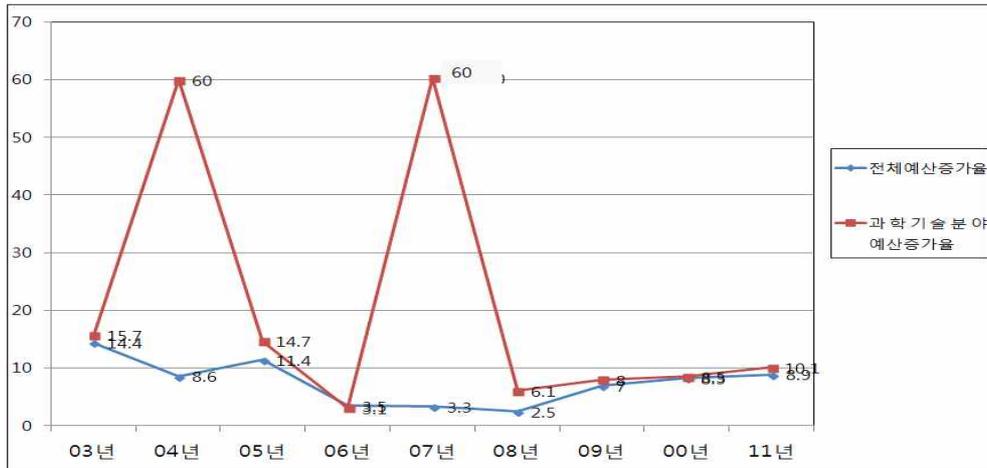
20) 린이푸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2001), 백산서당, p.56.

21)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괄』(2017), pp.38~42.

22) 김정일(2003), “강성대국건설에서 가장 절실한 과학기술 분야를 주공 방향으로 정하고

2018년 현재 제4차 계획을 실시할 정도로 추진해 왔다.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2003년~2011년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을 연평균 20%정도 증가시켜왔다고 한다.²³⁾

<그림 1> 김정일시대 전체 예산증가율과 과학기술분야 예산 증가율



*자료: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매년 예결산 정형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1> 김정일정권 시기 과학기술증시노선의 주요 전개과정

| 년도 | 주요 내용 |
|------|--------------------------------------------------------------------------------------------------------------------------------------------------------------------------------------|
| 19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과학기술증시노선 천명 ·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시작('98~2002) · 광명성 1호 발사 · 북한 전지역에 아랍계 자본의 도움으로 광케이블 개설 |
| 19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 · 과학원에서 김정일 첫 현지도 · IT, 정보화산업의 육성 및 인력양성 천명 |
| 2000 | ·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3대기둥의 하나로 천명 |
| 2001 | · 정보산업시대 담론 등장 |
|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경제건설노선 공식화와 4대특구정책 및 7.1조치 발표 · 김일성대를 비롯해 각 교육기관에 컴퓨터학과 신설, 중학교에 컴퓨터 수재반 설치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시작(2003~ '07) · 2.16과학상 개설 |
| 2004 | · 2.16과학상 처음 부여, 전년대비 과학기술분야 예산 60% 증액 |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p.3.

23)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2018), 산업연구원, p.74.

| | |
|------|-------------------------------------------------------------------------------------------------------------------------------|
| 2006 | · 제1차 핵실험 |
| 2007 | · 전년대비 과학기술분야 예산 60.3% 증액 |
| 2008 | ·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 '12) ·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2008~2012, 조선신보) · 2012년 사회주의강성대국 문패를 다는 해로 선포 · 오라스콤사와 합작으로 이동통신사업 시작 |
| 2009 | · 광명성2호 발사, 제2차 핵실험 · CNC혁명 천명,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 언급 · 지식경제담론과 과학기술강국론 제시 |
| 2010 | · 국가경제개발10개년 계획 수립 |
| 2011 | · 새 세기 산업혁명론 정립 |

* 자료: 이석기외(2018), p.77. 일부 수정.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핵심 실행전략으로 과학기술 중시를 강조한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우선 국방공업의 유지·강화와 함께 핵능력 강화 실험을 해나가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아직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고 있는 1999년도에 “설사 공장은 멋어도 과학기술사업만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²⁴⁾ 하며, 인민경제의 정상화 시도에 앞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 재원투입을 강조했었고, 2017년 11월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호 실험에 이르기까지 핵·탄도미사일 관련 군사기술의 일부 성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은 요소부존도를 고려한 비교우위전략은 적극적인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한적 개방을 활용한 자력갱생 정책(이른바 개방적 자력갱생 정책)하에 산업설비들을 정상화·기술개건하는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 경우 북한 산업경제의 정상화·발전에 필요한 응용기술적 측면의 과학기술 발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즉 최대한 국내자원을 활용해 산업경제를 정상화해야 하는 북한경제의 현실을 감안한 ‘주체기술’ 개발 측면의 과학기술이 필요했다. 예컨대 철강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전량 수입해야 하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활용한 ‘주체철’ 기술 개발, 철강의 용해시간을 대폭 줄인 ‘초고전력전기로’의 개발, 화력발전소에서 착화용 중유가 아닌 갈탄을 활용하는 갈탄착화방법 기술 개발, 나프타 대신 석탄가스를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석탄가스화 공정’ 기술개발 등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2001년부터 공장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산업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전체 산업생산 설비들을 그대로 활용할 것, 완전 설비개건할 것, 부분 설비개건할 것, 부분 생산공정 개건할 것 등으로 상세히 분류하여 기술개건해나가는 일명 ‘현대화 전략’을 수립했는데,²⁵⁾ 이 현대화 전략이 단순히 “과거 시기의 답습과

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p.40).

25) 2001년 북한의 홍성남 내각 총리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참석해 “현재의 경제적 토대를 정비하고 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하며 각 공장·기업

옛 것의 복원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갱신” 이어야 한다고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설비의 기술개선 사업과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최첨단 군사기술의 발전도 도모해야 하지만, 과학기술이 인민경제의 정상화와 더불어 북한경제를 ‘단번도약’ 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²⁶⁾ 이에 북한은 1999년부터 정보화와 IT산업의 육성도 강조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공정의 자동화·현대화를 산업정상화의 한 기조로 추진하며, 2009년 이후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핵심 성과로 경제의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화를 내세우기에 이른다.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이 자력으로 개발한 CNC기술의 덕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부터 북한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계설비 즉 CNC기술을 민수용 생산설비에도 적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²⁷⁾

<표 2> 북한의 기술개선 대상의 분류²⁸⁾

| 구 분 | 대 상 부 분 |
|--------------|---------------------------|
| 완전기술개선 | 지방공업·경공업부문, 닭공장 같은 식품가공부문 |
| 부분기술개선 | 지방공업·경공업부문, 중공업부문 |
| 부분 생산공정 기술개선 | 국방공업·기간산업과 연관된 핵심 산업부문 |
| 폐기처분 | 완전 노후화된 에너지다소비형 공장 |

* 자료: 권영경(2014)

북한이 주장하는 일명 과학기술에 토대를 둔 현대화전략은 국방공업과 연관된 핵심 산업부문→선행 산업부문→인민경제부문 순서로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진행되었지만,²⁹⁾ 사실상 자본의 부족으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출과 역할은 일부 핵심 소수의 전략부문에서만 행해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다른 일부(선행 산업부문 일부와 인민경제부문)는 기업소·공장 내지 지방행정 당국에 경영권을 이양(독립채산제화)하여 자체의 노력으로 기술개선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지출로 기술개건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연, 아연, 마그사이트 등 30여가지 유용광물의 수출대금 일부를 개선·

소의 기술개건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 당시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는 각 성, 중앙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술개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2002 북한연감』(2002), 연합뉴스, p.509.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술개건대상을 분류한 것은 「조선신보」 2002. 1.14자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26)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2000), 평양출판사, pp.31~37,

27) 이석기 외(2018), 위의 책, pp.75~76.

28) 이 분류는 북한이 위 문헌들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임의로 분류한 것임.

29)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8년 제4호)에 따르면 기술개건은 당장 실리가나는 것, 빨리 은(성과)을 낼 수 있는 것, 현존 경제적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당장 절실한 분야부터 기술개건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대화 예산항목으로 흡수하여 충당하게 하였다고 한다. 즉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30~40%를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광산과 기업소의 생산설비를 갱신하고 현대화하는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는 것이다.³⁰⁾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 따라, 북한의 산업설비들이 어느 만큼 기술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어느 정도 산업경제의 재가동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전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북한은 80년대 후반까지 파악된 4,700여개의 중소 규모 공장·기업소 중 설비가 노후화되고 폐쇄화된 1,800여개의 설비들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³¹⁾ 김정은시대 들어와 일부 경공업 관련 공장·기업소들이 부분개건을 넘어 최신 설비들로 개건된 모습이 최근 조선중앙TV 및 방북자 등을 통해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소수 전략적 부문의 생산공정들에서 자동화·컴퓨터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음이 관찰되고도 있다. 이에 한 연구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기술개선작업을 통한 부분적인 산업순환의 재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산해 보기도 한다.³²⁾

그러나 북한 산업경제의 핵심인 중공업 부문의 기술개건이 에너지·전력 등 기초 인프라의 재건과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는 특성상 거의 관찰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주체형 기술’ 도입에 의한 기술개건 공장·기업소들의 성과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볼 때,³³⁾ 선군경제건설의 한 내용으로서 주장되었던 spin-off효과는 크게 성과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은이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어떤 분야는 첨단에 올라섰는가 하면, 어떤 분야는 한심하다”³⁴⁾고 할 정도로 산업경제의 극심한 불균형만 초래했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관찰되는 중소 규모의 경공업관련 공장·기업소(일용식품, 화장품, 신발 등)의 부분·완전 개건 성과는, 독립채산제 및 시장의 활성화에 기초해 민간자본(돈주) 및 해외자본(주로 조선족 및 화교자본)의 유입이 상당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되고도 있다.

Ⅲ. 김정은시대 경제건설노선의 변화과정 분석

1.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함의 분석과 사회주의 경제강국 개념의 변화

30) 「조선신보」 2009. 8. 8자에 의하면 북한은 “광물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전략”을 세워 전 산업의 기술개건사업을 해왔다고 한다.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남은 연간 8만여톤, 아연은 20여만톤, 마그네사이트는 100만톤 생산되고 있어 일단 지속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원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31) 이석기 외(2018), 위의 책, p.24.

32) 이석기, 2009 민화협 정책위원회 경제분과 간담회('09.10.7) 내부 토론자료.

33) 북한은 김정일정권 말기 몇 년간 ‘주체형 기술’ 도입에 의한 주체철, 주체섬유(비날론), 주체비료 등에 의한 생산정상화를 상당히 선전했었지만, 김정은정권 이후 대략 2012년경부터 거의 선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기술들이 석탄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로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뒤떨어진 기술일 뿐만 아니라, 투입비용 대비 산출 효과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4) 노동신문 2016년 5월 7일자.

앞 장에서는 김정일시대의 선군경제건설노선의 목표와 의미, 실행전략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 노선의 일부 결과물(1,2차 핵실험과 광명성2호 발사)과 함께 많은 부정적 과제들이 김정은정권에 계승되면서, 김정은정권으로 하여금 경제건설노선을 계승하면서도 경제개발의 방향성으로 보다 버전-업 시켜야 하는 압박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김정은정권은 3대세습으로 계승되는 이른바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를 연착륙시켜 나가기 위해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수준으로 핵능력강화 시도를 계속 추진해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전반적 정상화와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제기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군수산업의 유지·강화가 체제유지의 우선적 필요충분 조건이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군수 → 민수로의 spin-off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2012년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문을 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³⁵⁾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선군경제발전전략은 만성적 빈곤국가의 현실과 함께 북한경제 구조가 계획과 시장의 하이브리드 구조로 이중화되는 현실을 남겨놓았다. 이제는 시장을 민생경제부문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포섭해나가는 정책을 필연적으로 추진하게끔 김정은정권에 압박하였다. 즉 선군경제정책에서 선경경제정책으로의 정책이동의 내적 필연성을 제기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정권이 3대세습체제로서 이른바 선대 ‘수령’들의 ‘업적’(?)을 계승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김일성시대의 ‘자주’와 김정일시대의 ‘선군’을 계승하면서 미완성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즉 나머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대수령들의 정책을 부인·부정하지 않으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김정은정권이 출범과 함께 제시한 ‘경제발전·핵무력강화 병진노선’은 이러한 배경하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전원회의를 개최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따라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확정한다고 공표했었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조성된 정세’란 3대 세습정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정전체제 수립 이래 최고조로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북한 스스로 최고치의 피포위 의식을 갖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란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선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시대처럼 핵무력 강화에 우선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흥미롭게도 다른 한편 새로운 병진노선이 과거 병진노선의 “계승이면서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라는 주장도 동시에

35) 북한이 2012년도에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정상화 목표는 권영경(2012) 참조할 것.

언급하였다. 김정일시대에 언급되었던 “군수→민수전환 spin-off 효과”의 가능성을³⁶⁾ 언급하며 이른바 선대 ‘수령’들의 병진노선과의 차별성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시대의 병진노선이 어떤 면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의 심화발전”이라는 뜻일까? 김일성 시대에 북한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대등한 힘을 넣어 둘 다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서도, 국방건설의 주요 인프라 토대인 군산복합형 중공업의 우선 발전이 경제발전을 추동한다고 주장하며 이 부문에 자원을 우선 투입했다.³⁷⁾ 김정일 시대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국방공업 우선 발전이 전반적 공업발전과 수요의 진작을 가져온다고 하며, 자원배분의 군사부문 우선 배분을 정당화했었다.³⁸⁾ 김정은 정권은 이와 달리 핵무력 증강이 전반적 경제발전을 추동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된데에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³⁹⁾라고 하며 자원배분 순위의 변경, 혹은 적어도 균형배분을 시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⁴⁰⁾ 그리고 3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였던 병진노선이, 사실상 불균형발전 논리로서 국방부문과 경제발전간에 자원배분의 상충성(trade-off)이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핵무력 병행 발전 노력이 인민경제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오지 않을 것임도 시사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이 마련된 지금 우리 당은...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할 데 대한 과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핵강국이 되면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⁴¹⁾

그렇지만, 병진노선과 인민경제의 향상이라는 목표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목표이다. 김정은정권은 정말로 핵무력이 완성되면 군사부문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추가적 국방비 지출을 행하지 않고, 인민경제의 축적분을 경제발전에 투입할 것인가? 김정은이 “군수공업 부문은 천하무적의 핵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대디셔야 합니다” ⁴²⁾라고 2013년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바를 볼

36) spin-off라는 표현은 북한이 2009년 광명성2호 발사 후 조선신보에서 “우주개발 과정에서 확립된 첨단 과학기술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며 직접 영문표기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강이록, ” 우주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첨단기술 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기둥“, 『조선신보』 2009년 4월 5일.

37) 김일성이 “인민경제부문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모든 힘을 다하여 국방건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1983), p.282.

38)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당의 선군정치』, 평양(2006), pp.105~110 참조.

39)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 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자.

40) 양운철(2016),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전망」,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 발제자료(2016.5.13.).

41)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은 항구적인 노선이다.”, 『로동신문』 2013년 5월 3일자.

때, 군사부문에서 민수경제 분야로의 자원 재배분의 변경은 세습체제의 성격상 쉽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판단했었다.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이 변화된 북한경제 구조 및 대외경제 환경을 반영해 김정일 시대보다 확장된 실용적 경제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정은정권의 입장에서 핵능력 강화에 토대를 둔 국방 역지력의 제고가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시장화 개혁과 대외개방을 적극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준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음 <표 3>은 3대정권하에서 주장되어 왔던 병진노선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해 본 내용이다.

<표 3> 시대별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과 특징

| | 김일성시대 | 김정일시대 | 김정은시대 |
|---------------------|--------------------------------------|--------------------------------------------------|----------------------------------------------------------------------|
| 병진노선 명칭 |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 선군경제건설노선 |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
| 자원배분 | 중공업(국방공업) 우선 배분 | 국방공업 우선 배분 | 부분우선 및 균형배분 |
| 계획시스템 작동실태 | · 계획시스템 작동 · 비군수 경제부문 계획적 관리 | · 군수부문에서만 계획 시스템 작동 · 비군수부문 계획적 관리에서 배제 | · 군수부문에서만 계획 시스템 작동 · 비군수부문 계획적 관리에서 배제 |
| 군수부문과 비군수부문과의 관계 인식 | · 자본형성효과 · 군수산업·중공업→농업·경공업 발전추동 | · 자본형성효과 · 국방공업→민수산업발전추동 및 spin-off 효과 가능성 제기 | · 자본형성효과 미연급 · 군수경제의 민수경제 제약성 인정 · 군수기술의 민수부문으로의 spin-off효과 주장 |
| 무기체계 개발결과와 군수부문 역할 | · 재래식무기체계 구축 · 비군수부문으로부터 일방적 자원이전 | · 대량살상무기체계 구축 · 경제난 이후 경제 재건·회복 동원 부분 역할 | · 6차례 핵실험 및 다종의 미사일실험으로 핵무기 질량적 강화 · 인민경제활성화 부분 역할 |
| 군수산업·육성을 위한 축적전략 | · 농업·경공업으로부터 잉여이전 · 해외 외화유입 군경제 | · 해외 외화유입 군경제 · 4대특구정책 · 7.1조치(체제내적 개혁) | · 해외 외화유입 군경제 · 경제개발구정책 · 시장활용정책 및 유리식경제관리방법 시행 |

* 자료:권영경(2015) 수정.

한편, 김정은정권은 새로운 병진노선을 제기하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개념의 구체적 형태를 지식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이라는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군수→민수전환 spin-off 효과”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담론들을 필연적으로 야기시켰

42)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당중앙전원회의 보고, 『조선중앙통신』 2013.4.2일자.

음을 볼 수 있었다.

사실 북한에서 “군수→민수전환 spin-off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처음 언급은 김정일정권 당시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후 CNC기술의 승리를 외치며 기술강국을 완성하고 강성대국의 문을 두드리는 직선 주로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선전하면서부터였다.⁴³⁾ 북한은 1994년 2~4축 표준형 CNC공작기계를 개발한 후, 10여년간의 노력과 김정일의 우선 추진 지시하에 2010년 9축 머시닝센터를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인 컴퓨터 제어장치와 구동장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후 국가경제 전반을 CNC기술로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자동화 수준을 높여가는 전략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음 <표 4>와 같이 북한 산업현장에서의 CNC화 추진을 4단계로 설정하고 이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2015년 현재 전국 1,300여개의 공장들에서 2단계 CNC화가 추진되었다고 한다.⁴⁴⁾ 외부에서 볼 때 아직 그 성과가 별로 관찰되고 있지는 않지만, 간혹 방북자나 조선중앙TV를 통해 관찰되는 개건된 공장·기업소 등의 일부 모습들이 그 결과물이 아닌가 추산되고 있다.

<표 4> 북한의 CNC화 단계별 추진계획

| 추진단계 | 내용 |
|------|----------------------------------------------------------------------------------------|
| 1단계 | 재래식 낡은 설비의 CNC전환: 설비갱신과 CNC화를 동시 개시 |
| 2단계 | 자동화된 유연생산구역 형성: 제한된 일정구역에서 CNC기술에 의한 생산기술을 적용하는 CNC공업화의 높은 단계 |
| 3단계 | 컴퓨터 통합생산체계 구축: 주문, 계획, 설계, 제작, 검사, 판매 등 전분야와 인력, 자재, 설비, 회계 등 경영관리도 컴퓨터망에 의해 통합관리하는 단계 |
| 4단계 | 무인화 실현 |

*자료: 이춘근·김중선(2015), p.11.

따라서 이 기술의 개발이 당시 북한내부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⁴⁵⁾ 사회주의 강성국가로의 입구에 들어선 상징물 내지 spin-off전략의 상징으로 내세웠었으며,⁴⁶⁾ 이것이 궁극적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의 신호탄으로서 김정 은시대에 지식경제형의 경제강국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다는 것이다.

43) 노동신문 정론, “침단을 돌파하라”, 2009년 9월 11일자.

44) 이춘근·김중선(2015), 『북한 김정은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 p11.

45) 2010년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모든 문헌들 및 선전물에서는 CNC가 최대 화두였고, 2011년에는 노동신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장군님과 CNC”라는 연재물(송미란, 노동신문 2011.3.3.일~3.26일까지 연재)도 등장해 김정일=CNC라는 등식으로 선전했었다.

46) 강호제(2015),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인공위성(광명성) 발사 시도와 CNC기술 개발”, 『북한과학기술연구』 제10집,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p.50.

“CNC실현을 통한 최첨단 돌파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영도업적이며 우리 인민에게 넘겨주신 귀중한 유산이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새 세기 산업혁명에 대한 령도는 오늘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전반의 현대화, 지식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여오신 령도과정은 동시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새 세기 산업혁명에 대한 령도과정이었다.”⁴⁷⁾”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대지도자인 김정은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개념에 대해 지식경제강국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할 것을 지시하자, 북한 내부에 당혹감과 함께 지식경제 시대가 무엇인지, 지식경제강국을 만드는 것이 기존에 선전되어 왔던 선군경제건설노선 하 과학기술중시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중적으로 학습되고 토론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2012년~2013년간 『경제연구』 지를 분석해 보면, 김정은이 지시한 새로운 방향성의 지식경제강국 건설이 김정일이 기초를 만들어 놓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지속해나가는 “영도 계승의 문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또한 “지식경제 시대에 그에 맞는 경제전략과 전술을 따라 세우지 못하면 경제강국 건설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성과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 방향은 응당 지식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⁴⁹⁾라는 표현도 볼 수 있었다.

사실 김정일시대에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국가 개념에서 2012년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강국의 개념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산업생산력을 회복시켜 놓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를 뛰어 넘어 “산업의 정상화가 단순히 현상유지나 기존 수준의 정상화가 아니라, 경제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대의 시대가 정보화시대, 지식경제시대이므로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누차 강조⁵⁰⁾한 것 같다. 이 때문에 『경제연구』지의 논문에서 “경제발전의 기본방향 문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새롭게 제기할 수 있다...당의 경제건설노선과 정책은 해당 시기 경제발전 방향을 규정하는 전략적 노선이다”⁵¹⁾라는 표현도 관찰된다.

그렇지만, 생산력 파괴 과정을 경험한 후 아직 산업연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복구되지 않은 북한경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지식형 산업구조를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

47) 김재서(20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의 중요과업”, 『경제연구』 2012년 제2호(루계 제155호), pp.4~5.

48) 김재서(2012), 위의 논문, p.4.

49) 리동수,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식 지식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 『경제연구』 2012년 제3호(루계 제156호), p.7.

50) 김양호(2013), “우리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리론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2013년 제4호(루계 161호), p.5.

51) 장경미(2012),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기본 요구”, 『경제연구』 2012년 제4호(루계 157호), p.17.

강국을 구축한다는 것일까? 북한은 “나라 경제를 지식경제형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규모가 작고 기존 선진국들의 공업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삼으면 가능하다” 고 주장하는데⁵²⁾, 이는 결국 과학기술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및 활용분야가 민수경제 분야로 이동해나가는 함을 의미한다. 경제개발전략과 과학기술이 일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김정은정권은 병진노선을 제기하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 재원투입의 정당성과 더불어 공장·기업소 경영의 효율화, 정보화 그리고 생산의 정상화·현대화 및 개건을 위한 과학과 생산의 일치, 과학과 경영전략의 일치 등을 강조해오고 있다. 선군시대의 군인우대 정책이 과학자 우대정책으로 변화되었다. 김정은시대부터 개시되는 제4차 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2013~2017)의 위상과 역할도 조정해 기존에 비해 첨단기술 분야의 비중 제고와 기초과학 육성,全民 과학기술 인재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배분을 늘렸는가 하면,⁵³⁾ 국가경제발전5개년 목표인 인민경제활성화 달성의 중요한 방도도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접히 결합되는데 있다고 노동신문 등 모든 문헌들에서 지속 강조하고 있다.⁵⁴⁾ 이는 마치 김정일시대에 ‘군사선행의 원칙’ 만이 계속혁명의 길이로 강성국가로 가는 방도라고 선전하듯이, 그 자리에 과학기술을 대치해 놓고 있는 느낌이다.

<표 5> 북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 5개년계획의 전개과정

이에 따라 김정은정권의 병진노선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이 부자연스럽게 제한적 개방과 7.1조치를 포섭하는 것과 달리, 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보다 확대된 개방정책, 그리고 과학기술과 생산개건의 현장에서 실리가 현실적으로 도출되도록 하는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조치 등이 필연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첨단기술이란 대외경제와의 관계속에서 습득되는 것이며, 경제단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생산현장과 민생수요와 결합되어야 과학과 생산간의 일치 성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이 갈망하는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유형이란, 경제·사회의 정보화,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수조건이므로 전면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지식산업의 육성이 가능한 기초 인프라 건설 및 경제개발을 필연으로 요구한다. 즉 김정은의 경제강국

52) 김양호(2013), 위의 논문, p.7. 또한 김정은이 “우리가 남들이 수십년동안에 이룩한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앞서나갈 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소개되고 있다.(임철웅,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추동력”, 『경제연구』 2018년 제3호(루계 180호), p.8.

53) 2014년 1월 김정은은 새해 첫 현지지도 현장으로 국가과학원 본원을 시찰하면서, “과학기술은 강성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을 천명하였고(노동신문, 2014.1.3.일자), 평양에 새롭게 건설된 뉴타운들 즉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살림집, 김책공대 교원살림집 등에 과학자들의 입주를 우선 배분하는 혜택정책도 시행하였다.

54) 노동신문, “비약의 원동력”, 2018. 11.21일자.

| 1차 (1998-2002) | | 2차 (2003-2007) | 3차 (2008-2012) | 4차 (2013-2017) |
|---------------------|---------------------|-------------------------------------|--------------------------------------------------|--------------------------------------------------|
| 인민 경제 | 에너지문제 해결 (6개 부문)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선 (8개 중요부문 53개 대상) |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 에너지문제 해결 (전력생산, 전기절약) |
| | 기술 개선 | | 기간산업 정상화 (5개 부문) | 인민경제의 개선, 현대화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설, 국토환경) |
| 인민생활 개선 (6개 부문) | | 인민생활 향상 (7개 부문) | 식량문제 해결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 먹는 문제 해결 (농업, 축산, 과수, 수산) |
| 기초, 첨단기술 (5개 부문) | | 첨단과학기술 (5개 부문 37개 대상) |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플라즈마) | 첨단기술 비중 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
| | | 기초과학 (4개 부문) |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 자료:이춘근, 김종선(2015), p.9.
구상은 시간이 갈수록 선경(priority to economy)으로 이동해가는 경제건설노선의 변화를 내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2.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의 변화 과정 분석

북한이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규정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야 한다” 고 제창했을 때만 해도 김정은정권의 병진노선으로부터 전략노선의 변화 시도는 쉽게 예측되지 못했었다. 당시 김정은정권은 병진노선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구적 노선이란 표현 자체가 변화나 융통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노선 규정이었기 때문이다.⁵⁵⁾ 북한 스스로도 '경제·핵무력 병진'은 변경이 불가능한 항구적 전략 노선이라고 주장했었다.⁵⁶⁾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2017년도에 제5차, 제6차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호 발사실험을 행한 후 스스로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고 선포하고, 2018년 4월 20일 개최한 제7기 제3차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이라고 하며 경제건설 노선 변경을 주창하고 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경제건설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존재하는데, 북한은 제7기 3차 당중앙전원회의 전문에서 그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첫째, 핵무력 완성으로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밝힌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관철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핵개발의 전 공정이 검증되고 자신들의 힘이 요구되는 수준에까지 도달되었으므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여도 된다는 것 등이다.⁵⁷⁾ 한마디로 국방의 자위력을 완성했으니 이제 핵무력 건

55) 통일연구원(2016),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p.13.

56) 외국문출판사(2015), 『조선에 대한 이해』, 제4권 군사편.

설을 중단하고 경제건설이라는 단일노선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건설노선 변화의 핵심 이유는 2017년 3번의 유엔대북제재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법 강화 이후 사상 최대치로 진행된 대북경제제재하에서 김정은이 목적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사회의 경제강국 건설에 심각한 차질이 오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김정은정권의 원래 목표인 ‘정상국가화’ 추진전략에 따라 이제 때가 되어 노선전환을 해도 판단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일찍이 김정은은 2013년 3월 10년만에 개최한 경공업대회 연설에서 “조선(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그리고 2016년 7차 당대회 직후 조선신보를 통해 “군사와 우주개발부문 기술을 민생기술로 전용해 인민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것”이 병진노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병진노선은 대북제재의 강화를 초래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목표에 위기국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민수전환 spin-off효과”도 의도된 것만큼 유도하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과학기술과 경영의 일체화라는 실행전략을 통해 군수와 민수간의 선순환 관계를 도모했었다. 김정은의 지시로 2015년 군수공장 등에 1,800여가지의 생활필수품들을 생산케 해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를 열기도 했지만,⁵⁸⁾ 1970년대부터 구조화되어 있는 군수부문에 대한 자원배분 구조에 변화가 유도되기란 쉽지 않고 북한내부에 여전히 논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림 2> 경제·핵무력 병진노선하의 경제작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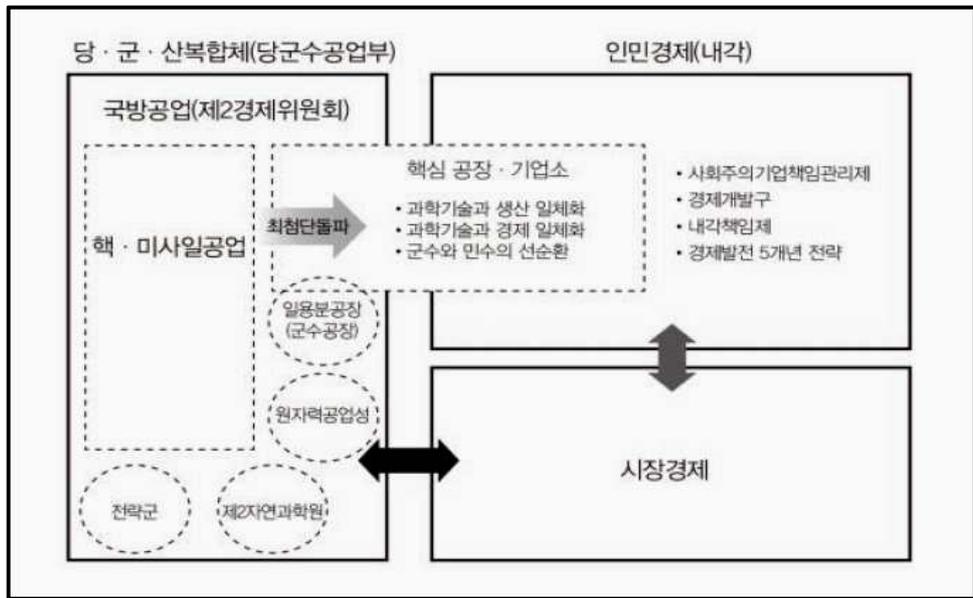
예컨대 4월 20일 새로운 전략노선이 선포되기 이전 올해 첫 번째로 발간된 북한의 경제연구지(2018년 제1호, 루계 178호)를 보면, 과학을 선차로 놓아야 한다는 주장과 국방공업의 위치문제를 옹기 해결해야 한다는 상호 배치되는 논문들이 나란히 편재되어 상호 논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과학기술중시이자 참다운 애국이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⁵⁹⁾

57)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었다”, 2018.4.21.일자.

58) 노동신문, 2015. 9.22일자.

59) 황 철(2018), “전사회적인 과학기술중시 기풍확립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루계 178호), pp.6~7.



* 통일연구원(2016), p.14.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국방공업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국방공업 문제를 옳게 해명하는 것은 우선 이 문제가 해명되어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옳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성의 관념에 의하면, 군수생산이 민수생산에 미치는 작용을 전반적 경제발전에 대한 제한적인 작용으로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만 간주되어 왔다. 이것은 군수생산물이 재생산환절에 다시 투입되지 못하고 군수생산에 대한 투자가 비생산적인 투자라는 근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만일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방공업의 지위를 소홀히 한다면...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다” 60)

그러나 이 논쟁 후, 북한에서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을 선차로 놓아야 한다는 논의로 재차 정리되어 나가는 것 같다. 2018년 4월 20일 새로운 전략노선 선포 후 가을에 발간된 『경제연구』 지 2018년 제3호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다...당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자면 과학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61)라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의 전략과 향후 전망

60) 광명철(2018), “국방공업의 지위를 옳게 밝히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루계 178호), p.9.

61) 안명훈,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노선”, 『경제연구』 2018년 제3호(루계 180호), p.5.

그런데 사상 최대의 대북경제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지가 북한에게는 과제로 남는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에 따라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해 나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전개되어 대북경제제재가 완화되어야 하지만,⁶²⁾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도 초에,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게 예정된 2018년 11월말 현재로서는 대북경제제재라는 대외경제환경이 상당 기간 존속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⁶³⁾ 북한경제의 이중구조화 고착 현상,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에 눈뜨고 있는 주민 생활경제, 시장세력과의 결탁되어 있는 특권계층의 이해관계, 최첨단을 선호하는 김정은 개인의 성향, 나아가서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던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의 경로변경 명분의 취약성 등이 맞물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공업을 선차로 삼는 경제노선으로 역주행하기에는, 북한경제 내부 동학 및 김정은정권의 실용적 경제정책 수행이 상당히 기존 정책에서 탈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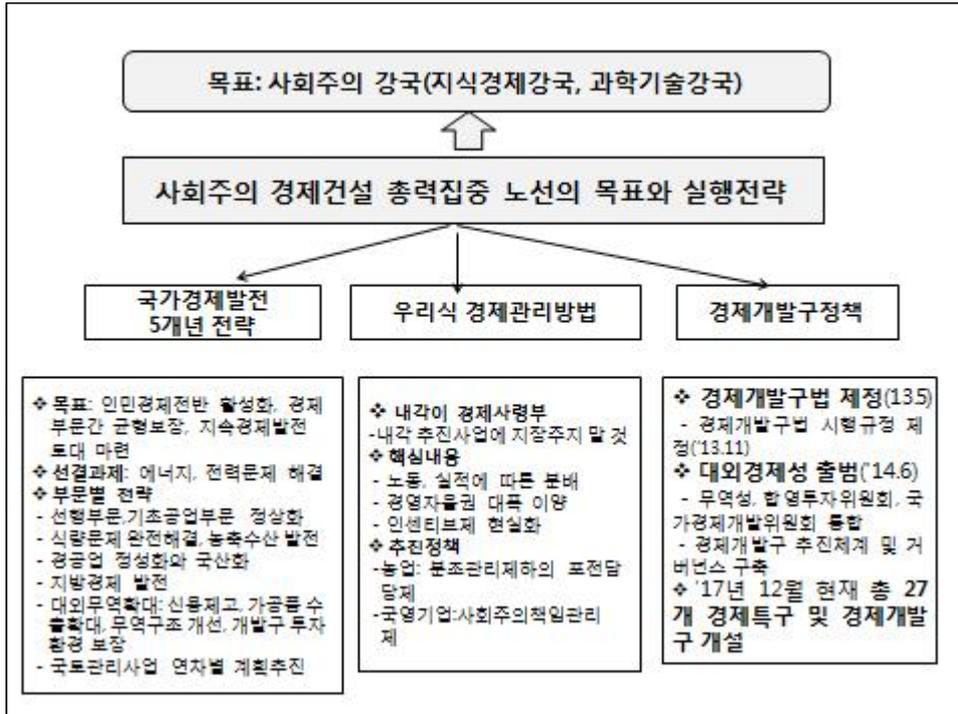
국제사회는 아직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 변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즉 선국방 대신 경제발전 총력 집중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자강과 자력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고 하는데,⁶⁴⁾ 그렇다면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나갈 경우 북한은 과연 자력갱생 원칙을 폐기처분할 것인지 역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든 포기하든 김일성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을 이완시키는 체제취약성 인자가 같은 비중으로 작동하고 있는 북한체제 내 ‘비핵화의 딜레마’를 고려한다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은 ‘북한식’ 특성을 갖는 점진적 개혁개방정책 기조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 노선은 이미 김정은정권이 출범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경제개발구 정책 그리고 제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국가경제발전전략 구상 등의 정책수단하에 추진되어 나갈 것이며,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각각의 정책수단들의 개혁성과 개방성이 보다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도식화해서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62) 연합뉴스, 2018.6.11.일자.

63) 북한 외무성 산하의 권정근 미국연구소장이 개인 논평 차원으로 “미국이 선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 조선신보는 2018.11.10.일자에서 이것이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북한 내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64) 임을출(2018), “김정은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새 전략노선과 남북경협 방향”, 『수은 북한경제』, 2018년 여름호(통권 제57호), p.31.

<그림 3>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목표와 전략



사실 김정은정권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은 대체로 김정일 시대에 추진했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4대 경제특구정책보다 개혁성이 보강된 정책조치이면서 개방성이 보다 확대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⁵⁾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라는 방식의 농업분야 개혁은 중국이 1978~1980년 시행한 포산도호제(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개혁수준이 낮다. 국영기업분야 개혁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중국이 1984년~1995년간 국영기업분야에서 추진했던 경영청부책임제에 상당부분 접근해 있다. ‘기업 자체 계획’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경영권(생산품 결정권 및 판매권, 가격결정권, 임금결정권, 인사권, 외자기업과의 합영·합작권, 국가 납부금 외 이윤의 자체 사용권 등)부여와 더불어, 심지어 은행에서 대부 받거나 주민들로부터 유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사실상 ‘돈주’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허용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영기업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 이러한 권한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았다.⁶⁶⁾ 대외무역분야의 경우도 1980년대 중국처럼 국가의 지도성 계획과 자체 무역계획이

65) 구체적 내용은 권영경(2015) 참조. 그리고 양문수(2014), “김정은시대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실태와 평가: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p.89. 양운철(2016) 등도 참조.

66) 상세한 내용은 양문수(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통일연구원, pp.81-115 참조.

병행하고 있지만, 경제특구 정책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이후 각종의 외자유치관련법들을 국제경쟁력있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중국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80년대 중국의 개혁조치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1980년대 중국의 개혁조치와 비교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 ‘80년대 중국의 개혁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
| 농 업 개 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80년:포산도호제(농가생산책임제) -인민공사 생산대로 전환, 집단토지 유지 및 개별농가 분배, 독립경영 -집단수매, 초과생산물 현물분배 ■ ‘81년 이후:포간도호제(농가경영책임제) -집단토지 개별농가분배, 독립경영 -생산물계약제, 국가납부·집단유보 외 잉여 생산물 농가소유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공사 해체, 집단농→개인농 전환 · 토지사용권, 가축 등 생산수단소유권 부여, 경영자주권 부여 · 계획수매+자유수매→계약수매+합의수매+자유수매 등 수확물의 수매방식 다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조관리제하 포전담당책임제 -축소분조(3~5명)에 토지할당(1정보), 포전 경작자유권 부여, 집단영농과 포전개별영농 병행 -수매가 인상, 계획수매량 외 초과생산물 현물분배 - 국가와 포전담당 분조 현물분배 비율 3:7 <p><중국과의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포산도호제와 유사하지만, 집단농 유지 - 축소분조의 토지할당 분쟁 끊이지 않음 · 협동농장 경영권 여전히 미흡 · 군량미수매 우선 원칙유지, 초과생산물의 현물분배 중국보다 미흡 |
| 국 영 기 업 개 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80년:포간경제책임제 -명령지표→지도성지표로 전환 -경영권 부분 이양, 이윤유보제 ■ ‘84~’ 95년:경영청부책임제 -당과 국영기업 경영조직 분리 -청부계약, 경영자주권(14개 부여) -계획생산과 자체계획 생산 병행 -개체경영, 사영경영(8인 미만) 허용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경리(경영책임자)책임제 도입 · 이개세개혁(재정개혁) 병행, 이윤납부 조세화 · 금융개혁 병행:기업경영자금 은행 통해 조달 · 부분 노동계약제 병행 · 비국유기업육성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지배인책임관리제 강화 -계획생산과 자체계획 생산 병행 -독립채산제확대→경영자유권 대폭 부여 -차등 임금지불 허용(월급제화), 자체 고용 부분 허용 -대외무역권 부여, 외화계좌 개설 및 합작·합영 허용 -지방공장 한정해 개인투자 허용(상급기관 입직조건) <p><중국과의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조치=포간경제책임제와 유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경영청부책임제 유사 · 대안의 사업체계유지(당과 기업조직 미분리) · 개체경영, 사영경영 미허용 · 재정 및 금융개혁 미병행 |
| 대 외 경 제 부 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 86년:무역관리체제 개혁 -무역공사 설립, 수출입권 이양 -무역의 이원관리체제(중앙과 지방) ■ ‘87~’ 90년:국가무역독점 해체,청부경영제 -기업의 외화유보율 80%로 인상 -지방정부,기업에 무역권 이양 -지령계획→지도계획 및 시장조절 전환 ■특구제도:4대특구→14대 연안특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무역과 자체 무역 병행(사실상 국가 독점무역 해체) ■ 22개 신개발구 지정, 총27개의 경제특구 개설 - 특구내 국내기업 진출 허용, 특구에서 외자기업과의 합작·합영 허용 ■무역행정체제 개혁 미흡, 외화제도 미개 |

| | | |
|----|------------------------------------------------------------------|----------------------------------------------------------------------------------------------------------------------------|
| | -국내기업 특구진출 허용, 특구에서 외국기업과 합작·합영 허용 | 혁 |
| 개혁 | <특징> · 지방정부, 무역회사 청부경영책임제 도입 · 외화관리제도 개혁 병행 · 점→선 점진 개방 | <중국과의 비교> · 내용상 ‘80년대 중국 개혁과 유사 · 무역행정제도 개혁 미흡, 외화관리제도 미개혁 · 경제개발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도 개발방식 도입으로 중국과 유사하나, 재원조달시스템 미구축 |

*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부(2011)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전반적으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아직 소유제방식에 대한 개혁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일 금융제도(mono-banking system)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개혁, 국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는 외화관리제도 개혁 등 거시경제적 개혁조치들을 병행하지 않고 있어 ‘80년대 중국의 개혁조치들에 비해 다소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개혁·개방 초기 중국이 추진했던 정책조치들을 상당 수준 벤치 마킹하고 있음도 보게 된다. 또한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이 항상 체제유지지향적 노선이었지만,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와 계획시스템의 붕괴로 사실상 점진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을 추후적으로 수용해나가는 필연성의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음을 볼 때, 아마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지속,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대외경제환경에 다소 유리한 조건들이 향후 조성된다면 이 정책수단들의 개혁성과 개방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두가지 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북한은 김정은집권 이후 20여년 이상 사실상 미작동되고 있는 경제계획의 와해를 인정하고 국가는 이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경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령성’ 지표를 적어도 ‘지도성’ 지표로 전환한 것으로서 기업소와 지방의 자체 계획권 및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대외경제환경이 적극 개선된다면, 자체 계획권 및 자율성을 부여받은 기업소 및 지방 인민위원회들이 참여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경제관리를 하였다. (이제) 국가의 전략적 관리방법에서는 전략을 세우는 사업으로부터 경제관리를 실현한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현행사업에 힘을 넣은 방법이었지만, 전략적 관리방법은 경제의 전망적 발전을 중심에 놓는다.” 67)

“지난 시기에는 실제적인 경영권은 국가가 틀어쥐고 행사하였으나…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은 경제단위들의 경영활동의 상대적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지도 관리방법

67) 송정남(2015),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015년 4호(루계 제169호), p.15.

이다...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68)

둘째, ‘북한식’ 사회주의발전단계론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 당시에 이어 재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루는 단계라는 2단계를 제시했었는데, 여기서 최종 승리단계란 ‘80년대 중반 공산주의 완전 승리단계에 해당되는 전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완결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사회주의기초를 다지는 단계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다.⁶⁹⁾ 그리고 2005년 이후 사라진 「사회주의 과도적 단계론」이 10년만에 재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과도적 단계의 상품경제 및 화폐경제 공간, 즉 가치공간을 옹계 이용해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완성되고 경제발전이 추동된다는 10년전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경제관리는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사회주의경제관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되어야 한다. ..현시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나가는데 나서는 기본요구는 객관적 경제법칙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다...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여러 가지 경제공간들을 옹계 리용하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70)

“사회주의사회가 본질적 특성과 함께 과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는 그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공간도 있고,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공간도 있다...경제관리방법을 개선시키자면 객관적 경제법칙과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하여야 한다...사회주의하에서 존재하는 가치공간을 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하여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제동하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할 수 없게 하며 인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71)

북한은 7.1조치 시행 당시 사회주의의 ‘과도적 단계’란 완전한 공산주의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의 단계로서,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상품경제적 특성이 불가피하게 병존해 있는 단계라고 규정했었다. 예컨대 예를 들면 계획지표로 물량지표와 화폐지표가 그리고 계획가격제와 시장가격제가 병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⁷²⁾ 북한은 2005년경까지 『경제연구』지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경제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과도기적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과도기적 현상의 올바른 이용을 강조했었다. 물론 과도기적 현상의 이용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을 해치지 않

68) 최성봉(2016),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필요성”, 『경제연구』 2016년 1호(루계 제 170호), p.12.

69) 통일연구원(2016), 위의 보고서, p.12.

70) 조경희(2015),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15년 2호(루계 제167호), pp6~7.

71) 김경실(2016),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공간의 본질과 위치”, 『경제연구』 2016년 2호(루계 제171호), pp16~17. 이 논문은 확실히 10년전 류운출(“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법주, 공간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제2호, pp18~20)의 논문 데자뷰라 할 수 있다.

72)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권영경(2008)의 논문을 참조할 것.

고 보충적 차원에서만 이용되어야함을 분명히 했었는데, 북한은 최근에도 여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삼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레토릭일 뿐, 사실상 경제관리에 있어서 가치법칙 및 가치공간(시장)의 활용 이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지난 10년 사이에 질적으로 심화되어 국가 재정과 계획공간조차 시장을 활용한 재생산 메커니즘에 인입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시 「사회주의 과도적 단계론」과 가치공간의 이용 필요성을 부활시킨 것은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시장공간과 대외경제공간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피해졌고, 이제는 시장공간을 국가의 관리내로 포섭해야 하는 절박성에 직면해 있는데 기인한다.⁷³⁾ 즉 김정은식 경제발전전략이란, 경제관리 및 경영관리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활용해 노력절약형 생산공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장·기업소를 현대화하고 지식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라는 주문인데, 이러한 과정을 자강력으로 달성하더라도 결국 실리가 보장되어야 가능하고, 이 실리보장의 합법칙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가치공간의 이용 필요성론이 부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⁷⁴⁾

요컨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이란,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삼는 경제발전전략으로서, 대북 제재로 인해 자강력에 의존하더라도 경제단위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해외 선진기술과의 협력을 필수불가결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일시대의 선군경제건설노선이 ‘분리형’ (two-trank) 방식으로 시장기능의 활용과 개방정책을 추구했다면, 김정은시대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라는 북한경제 내부 모순의 진화로 인해 ‘혼합형’ (dual) 방식의 경제개선관리조치와 경제특구정책이 필요충분 변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은 본질적으로 고전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노선에서 너무도 많이 탈주한 노선으로서 북한 스스로는 ‘개혁사회주의 체제’ (reformist socialist system) 단계의 위상을 지향하지만, 사실상 이행기적 내적 메커니즘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노선의 성공 여부는 ‘군수-민수전환 spin-off효과’가 현실적 결과물로 드러나야 하고, 이에 따라 김정은의 2018년 도전적 실험인 비핵화-경제개발 교환전략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V. 결론

73) 임을출(2018)도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삼으면서 경제관리 방식과 경제전략이 이전과 달라졌음에 주목한다.

74) 장경진(2012),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은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12년 제4호(루계 제157호), pp15~1; 문병하, “경제관리를 노력절약형으로 하는 것은 실리보장을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8년 제2호(루계 제179호), pp8~9.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 이후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이 2018년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북한의 문헌을 통해 내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김정은정권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은 김정일시대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 즉 김일성사회주의 체제유지를 넘어선 사회주의 강성국가 달성 전략이라는 일관된 흐름속에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제창된 노선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정권은 현실사회주의의 체제이행 대열에서 이탈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해 역사적 단계로서의 현실사회주의 이후의 또 다른 사회주의건설 유형을 보여주겠다는 욕망을 갖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목표를 내걸며 핵무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했었다. 그러면서 핵무력 강화를 위한 선군경제건설노선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경제부문을 추동하고 ‘단번 도약’도 가능케 한다는 이른바 ‘군수-민수 전환 spin-off’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군경제건설노선은 전반적 산업생산력 파괴 현상을 복원시키지 못했고,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배제된 민생경제 부문에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북한 거시경제 구조의 이중구조화를 고착시켜 놓았으며, 4대특구정책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병행정책이 필요했었다. 그렇지만, 김정일정권 말기에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연관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김정은정권이 이를 이어받아 화성15호 실험에 이르기까지 핵무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았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핵무력 생산 관련 공장이겠지만 일부 핵심공장에 CNC설비가 구축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이 첨단을 돌파할 수 있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선전하며, 김정은이 이를 ‘영도’ 계승해 핵무력의 고도화와 함께 경제건설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즉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자연스럽게 병진노선으로 진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여기에 세습 3대지도자 김정은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개념을 지식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개념으로 구체화·변경하여 기존에 군사부문이 차지했던 선차 자리에 과학기술을 위치해 놓고 김정일시대의 ‘단번 도약론’과 동일한 ‘최첨단 돌파론’을 주장하였다. 6차에 이르는 핵실험과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도 군수공업 부문에서의 민수품 생산, 과학기술과 생산 및 경영의 일체화를 강조하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제개발구 개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립 등 김정일시대보다 적극적인 실용적 경제정책도 시행하였다. 이런 흐름속에서 김정은정권은 화성15호 발사 실험 이후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고 스스로 판정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새로운 전략노선을 발표하였다.

즉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선군경제건설노선→병진노선→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의 진화과정은 소위 전략적 지위의 달성과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도 과학기술을 축으로 경제의 정상화와 함께 단번 도약도 도모하는 북한식 경제개발 전략의 일관

성이 담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성과에 대한 평가 여부가 어떠하든 ‘군수-민수전환 spin-off전략’의 점진적 진화과정도 담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외경제부문과 시장과의 관계 설정이 확장의 방향으로 진화되는 불가피성도 포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은 ‘김정은식’ 개혁·개방정책의 본격화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은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하기 직전 이미 2012년 1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3대세습 정권인 김정은시대에 결국 ‘북한식 개혁개방’ 사례를 만들 것임을 예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향후 베트남처럼 ‘김정은식’ 개혁개방이 담보되는 안보환경이 과연 조성될지, 조성되더라도 그 시간표가 언제일지에 따른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⁷⁵⁾ 또한 ‘김정은식’ 개혁개방 모델이 어떤 유형일지도 이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5) 북한은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의도된 것만큼 대북경제제재의 부분 완화가 성취되지 못하자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당의 구호를 주체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진력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노동신문 2018.11.9.일자)고 기존의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지만, 총체적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이록, “우주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첨단기술 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기둥 “, 『조선신보』 2009년 4월 5일자.
- 강호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인공위성(광명성) 발사 시도와 CNC기술 개발”, 『북한과학기술연구』 제10집, 2015,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곽명철, “국방공업의 지위를 옹계 밝히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루계 178호).
- 권영경,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 행동향에 대한 분석”, 『수은 북한경제』, 2005년 겨울호, 2006.
- ,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북한경제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원, 2010년 3월호.
- , “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2014년 과제논문.
- 김경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공간의 본질과 위치”, 『경제연구』 2016년 2호(루계 제171호)
- 김양호, “우리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리론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2013년 제4호(루계 161호)
- 김재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의 중요과업”, 『경제연구』 2012년 제2호(루계 제155호)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2000), 평양출판사.
- 류운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범주, 공간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제2호
- 리기성, “새로운 혁명적 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고 있는 조선경제”, 『2009년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자료집』.
- ,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 관철에 나서는 중요한 요구”, 노동신문 2018년 10.29일자.
- 리동수,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식 지식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 『경제연구』 2012년 제3호(루계 제156호)
- 린이푸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2001), 백산서당.
- 문병하, “경제관리를 로력절약형으로 하는 것은 실리보장을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018년 제2호(루계 제179호)
- 성채기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준비증강능력』, 2003, 한국국방연구원.
- 송미란, “장군님과 CNC”, 노동신문 2011.3.3.일~3,26일자.
-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015년 4호(루계 제169호),
- 안명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력사적 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0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년 제1호 루계 제154호
- ,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 『경제연구』 2018년 제3호(루계 180호)
- 양문수, “김정은시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4.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통

일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7, 통일연구원.
 양운철,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전망」,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
 발제자료(2016.5.13.).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외국문출판사, 『조선에 대한 이해』, 제4권 군사편, 2015.
 이석기,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와 전망”, 2009 민화협 정책위원회 경제분과 간담
 회('09.10.7) 내부 토론자료.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2018), 산업연구
 원.
 이희옥, “김정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경제발전 셈법은 달라”, 중앙일보, 2018
 년 11월 26일자.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2015, STEPI
 Insight 제173호.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2001,
 『2001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제3권)』, 통일부.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통일연구원, 2000.
 임을출, “김정은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새 전략노선과 남북경협 방향”, 『수은
 북한경제』, 2018년 여름호(통권 제57호)
 임철웅,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추동력”, 『경제연구』 2018년 제3호(루계
 180호),
 장경미,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기본 요구”, 『경제연
 구』 2012년 제4호(루계 157호)
 장경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은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
 제연구』 2012년 제4호(루계 제157호)
 조경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15년 2호(루계 제167호),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간부용 강습제강,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리마대진군을 승리에
 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데 대하여』,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200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정치』, 2006, 조선로동당출
 판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경제개괄』, 2017, 평양.
 통일연구원,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2016.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2000, 평양.
 최성봉,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필요성”, 『경제연구』 2016년 1호(루계 제170
 호)
 황 철, “전사회적인 과학기술중시 기풍확립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신 경애하
 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루계
 178호).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1999년 6월 16
 일자.
 노동신문 정론, “침단을 돌파하라”, 2009년 9월 11일자.
 노동신문,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항구적인 로선이다.”,

2013년 5월 3일자.
노동신문, 2015. 9.22일자.
노동신문, “비약의 원동력” , 2018. 11.21일자.
노동신문,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당의 구호를 주체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진력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 2018.11.9.일자.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당중앙전원회의 보고, 2013.4.2.일자.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 2018.4.21.일자.